



길게 늘어난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50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김태규 기자

“육아기 근로단축 연차 감소분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장맘·대디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광주지역 이용자는 2018년 84건, 2019년 106건, 2020년 385건, 2021년 3분기 기준 409건 등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연차발생에 불이익이 없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

시,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최대 30만원 지급
돌봄비용·재생산 손실 예방...자기돌봄기회 제공

는 제도 사용기간과 단축 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고, 돌봄비용·재생산 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의 연차 감소분 지원으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과 자기돌봄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주시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으로,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200여 명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장맘·대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광주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며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이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과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무료관리구제지원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시, 자치구 대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9억6천만원 규모 5개 유형...내달 1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반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가 공모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했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시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자치구 산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 지원규모는 9억 6000만 원으로 자치구에서 대응자금 10%를 부담하며, 교육훈련, 취업연계사업, 창업·창직 지원, 샌드박스, 기타 사업 등 5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교육훈련사업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

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이다. 취업연계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창직 지원은 창업·창직 기초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이다.

기타 사업으로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그 밖에 지역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 자치구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자치구별 산업구조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 원활한 취업연계 등 참신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기업 인력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인증 캠페인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
행복한 우리 남구
Gwangju Namgu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광주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지역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창출로
광주 제1의 경제·문화 중심도시 조성

~2021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15만평), 에너지밸리 일반산단(28만평)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비즈니스 환경조성

2018-2026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동, 사직동, 백운광장 추진중(1,299억원)
송암동, 방림동 공모예정(공모신청 시 600억원)

~2021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 건립

노후된 송암공단을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기지로 조성 1046억원 투입

~2021
송암산단 문화융복합 4차산업 거점 기지 조성

CGI관객센터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 준비,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남구

광주시, 신규 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평동3차, 빛그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등 3곳

광주시는 신규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산단은 평동3차, 빛그린, 도시첨단·에너지밸리 등 3곳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영산강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단 기반시설이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비 154억 원, 처리용량 2,000톤/일)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비 144억 원, 처리용량 1,000톤/일)이 있다.

광산구 평동3차산단(사업비 120억 원, 처리용량 550톤/일)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광주·전남빛그린산단은 건설이 완료돼 오는 17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해 6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국가산단 도시첨단과 지방산단 에너지밸리 산단은 건설이 진행 중으로 5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 11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은 기기

의 운전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무부하 시운전과 오·폐수 및 수처리 미생물 투입 후 시험 운전하는 부하 시운전을 실시해 방류수의 적정수질을 확보하고 설비 최적화를 위한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산단 및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은 지하에 배치했으며, 철저한 악취처리시설이 구축돼 있어 냄새 또한 최소화했다.

문점환 시 하수관리과장은 “물을 사용한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단계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돼 산업단지 생산력 및 산단 주변의 환경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이재명 ‘광주·전남 특보단’ 출범

임명장 수여·지지세력 확대

가졌다.

정 단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후보는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유능한 대통령,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일 잘하는 대통령,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실용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특보단이 온 오프라인에서 중도층에게 성실하게 다가가 호남 지역에서부터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만들어 달

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전국을 돌며 특보단을 조직하고 중도층 지지확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 김명진 특보단 총괄상근 부단장과 전용기 청년특보단장이 함께 했다.

정 단장은 경기도 양주, 동두천 지역의 4선 의원으로 국회에결원위원장을 지냈고 이재명 후보와 사법고시 동기 34년 동안 정치행보를 같이 해온 최중근이다.

/조기철 기자

전남도, 설 앞두고 한우 둔갑 판매 집중 단속한다

유통업체 등 대상 유전자·이력표시 등 검사

전남민생사법경찰이 설을 맞아 17일부터 28일까지 한우 유통업체와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과 등급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한우 취급업체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소고기를 직접 수거해 유전자 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 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우 등급 허위 표시’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매년 설과 추석에 한우 이력표시 위반단속을 하고 있다. 최근 단속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없으나 이력표시 관리를 소홀히 해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력표시 관리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 사법경찰을 통해 계속해서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행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우 구입 시 이력표시를 확인하고, 이력표시가 의심되면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